

# 해상구획선 현행화·정밀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 도입에 관한 고찰

박현탁\* · 장우태\*\*

\*해양경찰교육원 교수요원, \*\*해양경찰교육원 교수요원

**요 약** : 해상구획선의 정밀도는 연안에서의 법 집행, 경제권, 해양환경 보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. 하지만 기술적 한계로 인해 일정 수준의 오차가 존재한다. 이 연구에서는 각 분야 마다 분쟁 가능성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에 대한 제언하였다.

**핵심용어** : 해상구획선, 어업권 분쟁, 어장 관할권, 항행안전, 해양환경 보호

## 서론

해상에서 구획침범, 위반에 관한 법 집행시 위치정보 확인이 필수적이나 기술적 개념적 오차로 인한 분쟁소지 다분

- 해상에서 위치 특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중인 경위도 좌표(WGS-84)는 실제 해상에서 24m 이상 오차가 발생
- 이로 인해 생물자원 채취, 면허권 침범,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현상 발생

## 해상관할권 분야별 고찰

연안해상에서 발생하는 경계선 침범으로 인해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다수

- 어업권 분쟁 : 일부 지자체 간(경남-전남, 홍성-태안, 고창-부안 등) 어업권 관련, 줄타기식 경계침범 조업 발생 가능성 다분
- 어장 관할권 : 전파탐지능력이 미비한 소형어선의 마을어장 내측 조업 등 정밀한 해상 경계선 인식에는 한계 존재

항행안전 : 김, 미역 양식장, 가두리 양식장의 경우, 양식어업 허가범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단중설로 인근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상 위해 소래 가능

해양환경 보호 : 어업금지 구역선, 유조선 통한금지선 등 침범사례 발생시 경계선이 모호할 경우, 법집행의 혼선 소래

## 결론

현재 추진중인 10cm 이하 고정밀 위치 측정정보를 제공하는 '차세대 해양 위치정보(PNT) 서비스(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)' 사업과 연계하여 각종 해상 경계선의 정밀한 측정체계 구축 필요

- 특히, 연안을 통항하는 소형상선 및 어선 e-Navigation 등에 해상경계선 정밀 표시 필요
- 아울러, 각종 해상경계선에 대한 변동정보 실시간 입력, 공유를 위해 부처 간 협업 및 전담 플랫폼 구축 필요

\* kcgph@korea.kr  
\*\* hanlekim@korea.kr